

파리강화회의의 외교독립론에 대한 희망과 좌절

1919년 ~ 1920년



1 개요

'파리강화회의'는 1919년 1월부터 1920년까지 이루어진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 전체를 뜻한다.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에서 약 5개월간 영국, 미국, 프랑스 주도로 약 30여 국가의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후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국제문제를 풀어나갈 원칙으로 선택된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주장했던 14개조이다. 이것에 근거하여 1920년까지 패전국과 승전국 간의 조약협상이 진행되었다. 파리강화회의의 개최 소식은 식민지가 된 한국 독립운동가에게 영향을 주었다. 상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은 여운형(呂運亨) 명의로 작성된 '독립청원서' [관련사료](#)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며, 김규식(金奎植)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로 파견하였다.

2 파리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 윌슨의 14개조

1919년 1월부터 6월까지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약 30여 개 국가가 참여하였지만, 실제 회의를 주도한 것은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이었다. 추후 일본과 이탈리아가 여기에서 빠지면서 영국, 프랑스, 미국이 주도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국가들은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협상이 진행되었다.

파리강화회의의 진행 원칙은 미국 대통령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이 미국 의회에서 발표했던 14개조였다. 독일 정부는 휴전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윌슨의 14개조를 수락했다. 윌슨의 14개조에는 비밀외교 폐지, 패전국에 대한 무 병합·무 배상 원칙, 국제연맹의 결성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중 가장 쟁점이 되는 항목은 제5조였다. 제5조에는 “식민지 주권의 결정에서 주민들과 들어서게 될 정부 사이의 자결(self-determination)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이것은 민족의 자결을 직접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당시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제5조에 명시된 ‘자결’을 민족의 자결로 해석하고 전유했다.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10월 혁명 직후 발표된 레닌(Vladimir Il'ich Lenin)의 선언들에 대항하려는 측면이 강했다. 레닌은 “혁명에 의한 제국주의 국가를 타도만이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며, 세계사회주의혁명을 완수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에 반하여 윌슨은 “제국주의 국가 간의 타협과 양보에 의해 식민지 문제를 점진적,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윌슨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영향이 식민지 약소민족들에게 미치는 것을 차단시키려고 하였다.

윌슨이 주장한 14개조 원칙은 파리강화회의의 기본 원칙으로 설정되었지만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윌슨의 주장은 유럽이 처한 현실과 괴리가 있었고, 적용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안보를 강조하던 프랑스의 입장과 배치되었다. 프랑스는 독일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는데 주력하고 있었다. 둘째 비밀외교로 이미 맺어진 조약의 실행에 관한 것이었다. 비밀외교는 윌슨이 제기한 14개조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 조약의 실행을 놓고 미국과 이탈리아와의 대립이 일어났고, 결국 이탈리아는 파리강화회의에서 퇴장하였다.

3 파리강화회의와 일본, 중국

일본은 이탈리아가 회담에서 이탈하면서 이익을 얻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스스로 참전을 결정하였고 연합국 측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1917년 초, 일본은 지중해에 해군을 파견하였다. 그 대가로 적도 이북에 있던 독일의 식민지와 중국 산둥반도에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획득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일본은 전쟁 중에 맺어졌던 이 합의를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이러한 요구는 윌슨의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측은 난색을 표시했다. 이에 일본은 파리강화회의에 불참하겠다고 결정하였다. 이탈리아가 이미 이탈한 가운데 일본이 회의에서 빠지게 될 경우 파리강화회의가

가지게 되는 위상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본이 독일, 소련 등과 같은 미국의 잠재적 경쟁국가와 연결될 위험성도 있었다. 결국 일본의 이러한 요구는 1919년 6월 28일에 서명된 베르사유조약에 반영되었다.

일본의 이권을 인정한 결정은 중국 내에서 강한 반발을 가져오게 되었다. 파리강화회의에서 중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의 자격으로 독일이 가지고 있던 산둥반도의 이권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연합국들은 일본이 요구한 산둥반도의 이권이 걸린 21개조 요구를 승인하였다. 이에 중국 청년, 학생 청년들 약 3,000여 명은 1919년 5월 4일 베이징에 있는 톈안먼(天安門)에서 모여 집회를 하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것을 중국 5·4 운동(五四運動) 또는 1919년 톈안먼 사건(天安門事件)이라고 한다.

4 베르사유조약 및 여러 조약들

1919년 6월 28일 국제연맹의 조직 및 독일을 제재하는 규정 등이 포함된 베르사유조약이 발표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인 연합국과 독일 사이에서 맺어진 이 조약은 총 440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1919년 1월부터 미국, 영국, 프랑스의 주도로 이루어진 파리강화회의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조약에 의해 독일은 해외 영토와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하게 되었으며, 알자스로렌 지방은 프랑스에 반환되게 되었다. 결국 독일은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에게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영토 15%, 국민 10%를 내주게 되었다. 베르사유조약의 규정 중 중요한 부분은 국제연맹에 대한 것이다. 국제연맹은 집단안보, 국제분쟁의 중재, 무기감축, 개방외교 등을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하였다.

연합국은 오스트리아와 1919년 9월 생제르맹 조약(Saint Germain Treaty)을 맺었다. 이 조약에 의해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오스트리아 영토 중 일부는 폴란드,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등에게 귀속되었다. 한편 연합국은 1919년 11월 불가리아와 뇌이조약(Treaty of Neuilly)을 체결했다. 그 결과 불가리아의 일부 영토는 그리스와 유고슬라비아에게 할양되었다. 1920년 6월에는 연합국과 헝가리 간에 트리아농(Treaty of Trianon) 조약이 맺어졌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오스만제국과 세브르 조약(Treaty of Sèvres)이 맺어졌다. 이 조약들에 의해 헝가리와 오스만제국은 영토가 분할되었으며 군비가 축소되었다. 결국 파리강화회의와 그 연장선상에서 맺어진 일련의 조약들은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군비축소 조치를 시행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약에 근거하여 독일을 비롯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국가들의 식민지는 독립을 할 수 있었다.

5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한국 지식인들의 인식

1차 세계대전의 진행상황과 전후 처리 방안에 대해 일부 한국 지식인들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이들은 한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공헌한 바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파리강화회의가

한국의 독립을 보장하는 자리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안창호(安昌鎬)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내 한인사회에서 “윌슨 대통령에게 한국의 독립승인을 요구하고,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할 경우 한국의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에 매우 회의적이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의 독립만을 위해 일본과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는 한국 민족의 정신상의 독립, 생활상의 독립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일본 유학생들 역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회의적이었다. 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승전국의 식민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당시 많은 한국 지식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와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하지만 민족자결주의가 담긴 윌슨의 14개조 원칙이 제1차 세계대전 종료 후 전후처리의 원칙으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자결주의가 보편적 국제질서의 원리로서 제시되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독립운동의 계기로 삼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18년 11월 미국은 크레인(C. R. Crane)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후에 있을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중국의 대표를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하게 하여, 승전국이지만 이권을 빼앗긴 중국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였다. 크레인인은 “중국도 그동안 일본에게 받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발언하였다. 또한 “파리에서 개최될 강화회의는 압박민족에 대해서는 해방을 강조한 것이므로 약소민족에게는 절호의 기회이다”라고 하였다.

한편 크레인의 연설을 들은 여운형은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대표도 참석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을 식민지 조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것이었다. 여운형은 크레인을 방문하여 한국의 대표가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명칭만 존재하던 신한청년당이라는 단체를 실체화 했다. 여운형은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1통은 1918년 11월 30일 상해를 떠나는 크레인에게 주어 윌슨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1통은 당시 상해에서 발행되던 월간잡지 『밀라드 리뷰(Millad Review)』의 사장 밀라드에게 맡겼다. 그리고 김규식을 대표로 삼고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1919년 2월 김규식은 파리로 출발하였다. 파리에 도착한 후 김규식은 한국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출석하여 독립을 호소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와 함께 한국독립에 대한 후원, 동정, 홍보, 청원에 초점을 맞추고 활발하게 활동을 전개하였다.

상해에 있던 신한청년당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려고 하였다.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윤해(尹海)와 고창일(高昌一)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었다. 미주에서는 이승만, 정한경(鄭翰景), 민찬호(閔燦鎬)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유림을 중심으로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것을 ‘파리장서사건’ 혹은 ‘파리장서운동’이라고 한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자신들의 최대 식민지였던 한국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한 미국은 러시아에서 일어난 혁명의 결과가 동아시아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파리강화

회의를 순조롭게 끝내기 위해서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였다.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이승만의 여권발급 신청을 거절한 미국정부의 태도는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당시 파리에 있으면서 이승만의 여권발급 요청 소식을 들은 미국대통령 윌슨은 "이박사(이승만)가 파리에 오는 것은 유감"이라고 하였다. 최종적으로 미국 국무장관 폴크(Frank L. Polk)는 이승만에게 여권발급이 불가함을 알렸다.

이러한 국제관계속에서 파리강화회의에 참여하여 독립을 청원한다는 한국독립운동가 들의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었다.